

“아리셀 참사 23명 노동자 두 번 죽인 국민의힘 우재준 즉각 사퇴하라”

✎ 편집국 | ⓒ 승인 2025.10.17 15:28

민주노총·아리셀대책위·유가족협의회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
"박순관 15년형 과도, 패가망신" 발언 우재준 의원 사퇴 촉구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재사망 유족들이 모여 우재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우재준 국회의원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두고 ‘막말’을 내뱉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유족과 노동계의 항의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쏟아졌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재사망 유족들이 모여 우재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 의원은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참사는) 과실치사이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23명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

시 대못을 박았다"며 분노했다. 현재까지도 우재준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거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분노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것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치인의 막말은 총칼보다 무섭다. 우재준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 15년 구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형량이 지나치다는 망언을 한 것은 총칼만 손에 들지 않았을 뿐 그 의도가 똑같다"고 규탄했다.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된 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산업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노동자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우재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자"라고 발언 비판을 가했다.

이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또 "지금 당장 아리셀 참사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망언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새 정부 노동안전 대책 무력화로, 아리셀 대표 15년 구형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유가족과 함께하는 민주노총과 민주시민사회의 분노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한 뒤 "산업재해로 매일 2명 이상이 사망하고, 올해에만 수백 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나라에서 산업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노동자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우재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자"라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재사망 유족들이 모여 우재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리셀은 군납 배터리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법 파견과 각종 산안법 위반으로 23명을 죽였다. 그러나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뽀뽀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도 이것이 과실치사인가? 1명의 노동자 사망에 1년 형도 못 미치는 것이 과도한 선고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막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스럽고 참담하다. 우재준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 도대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런 궤변을 멈출 것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아리셀 유족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결국 김태윤·이순희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당사에 직접 서한 전달 후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재사망 유족들이 모여 우재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재사망 유족들이 모여 우재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편집국 kctu.news@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